



제29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3. 7. 14.

**자치행정위원회**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3년 7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7월 5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 상위 법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022. 12. 27.) 사항 반영
  -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 추가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심의)
  -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해촉 규정 신설  
(민간위원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참여 배제)

##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개정 조례안 제4조)

- (심의대상 추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공무원 (퇴직한 공무원 포함)이 법률전문가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규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 대상으로 규정 ⇒ 중복되는 내용 삭제

나.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 (개정 조례안 제8조)

- (해촉사유 추가)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 규정에 맞춰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삭제

#### 4. 참고사항

가. 참고자료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법무담당관

라. 입법예고 : 2023. 5. 18. ~ 2023. 6. 7.(20일간)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수사 또는 민사상 책임 관련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 대상을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정하며 (운영규정 제17조 관련)
- 조례안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중복됨에 따라 이를 상위 규정을 인용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
-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12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

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7.>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혐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 요인

- 「남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은 「남양주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규정」에 따라 기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제도를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추가 예산의 발생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 4. 작성자

- 법무담당관 김 진 배